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절차 본격화

오늘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18명 특별법안 발의 내달 중 시도의회 의견 청취·국회 법안 처리 전망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던 명칭과 주청사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특별법 발의가 가시화됐다. 특별법안은 다음달 중 국회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 사이 주민투표를 대신할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만 남는다면 1호 통합특별시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28일 ‘전남 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

할 예정이다.

이날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위한 제4차 간담회에서 통합시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특별법 발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약 8편, 300여개 조문과 9개 분야 300여건의 특례조항으로 구성되며 재정, 조지, 인사, 재정 자치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회, 공론조사 결과 반영 등 입법 심사와 수정·보완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도로 마련된 특별법을 놓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2월 28일) 회기 중 특별법 의결을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발의를 기점으로 주민투표를 대신할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이뤄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상 국회 법안 통과 전 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시·도의회에 긴급 의안 형태로 ‘행정통합 의견 청취안’을 올려 의회 동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광주시의회는 다음달 2~9일, 전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 기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시·도의회 공동 TF 구성을 전남도의회와 사실상 거부하고 실무 협의만 진행하기로 하면서 통합 의회 구성 방식, 의원 정수 등이 쟁점화 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충분한 속의를 거쳐 도출된 의견이 추가로 반영될 수도 있다”며 “시·도의회 동의만 남는다면 1호 통합 특별시 탄생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7일 전남 영광 흥농읍의 한 돼지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되자 방역당국에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남서 첫 발생

도, 영광 양돈농장 확산 차단 방역 총력

전남 영광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전남도가 즉각적인 초동 대응과 함께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에서 ASF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영광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새끼돼지의 폐사가 확인됐고, 농장주 신고를 받은 방역당국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양성 판정이 나왔다. 해당 농장은 돼지 2만1000마리를 사육 중인 대규모 농장이다.

확진 직후 전남도는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긴급 소독에 나섰다.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모두 신속 살처분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인근 양돈농장을 대

상으로 이동 제한과 함께 집중 소독, 임상 및 정밀검사를 병행하는 등 확산 차단 방역을 강화했다. 돼지 사육 농장과 관련 종사자, 차량을 대상으로는 28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도 발령됐다.

전남도는 공동방제단 99개단과 시·군보유 소독차량 등 가용 소독자원 85대를 총동원해 주요 도로와 농장 주변,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외부 차량과 인력 유입 가능성이 있는 거점 소독시설 운영도 강화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외부인 출입 통제와 전실 이용, 농장 내의 소독,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202억원 투입

여객선 운임 지원·소외도서 향로 운영으로 이동권 강화

생활물류·연료·생필품 지원 확대…물가 부담 등 완화

전남도가 올해 섬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 안정 강화를 위해 202억원을 투입한다. 여객선 운임 지원부터 생활물류비 경감, 디지털 행정 도입까지 섬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주 여건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2026년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총 202억원을 편성하고, 해상교통과 생활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지리적 제약으로 발생하는 이동 불편과 높은 생활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해상교통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186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섬 주민 전원 여객선 운임 지원’을 비롯해 일반인 여객선 운임 지원, 소외도서 향로운영

등 4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장기간 불편을 겪어온 10개 소외도서, 8개 향로에 안정적인 뱃길을 운영해 해상 교통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물류 지원도 강화된다. 전남도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생활연료·생필품 물류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주민들이 택배비 등 지원을 신청할 때 반복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생활물류 운임지원 전용 앱’을 새로 구축한다.

전용 앱을 통해 증빙서류를 스마트폰으

로 간편하게 제출하고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추고,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근식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섬 주민이 겪어온 지리적 불편을 당연한 것으로 두지 않고, 육지와와의 실질적인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여객선 공영체 확대와 전국민 여객선 운임 국비 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디지털 행정을 접목해 복지 수혜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靑 “관세합의 의지 美에 전달…차분히 대응할 것”

김용범·위성락 주재 회의 김정관·여한구 미국 파견 특별법 ‘2말3초’ 통과 전망

청와대는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 측의 진의와 발인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미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정부관계자들도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소화 중인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니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에 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에 통과시켜달라는 게 (원래) 정부의 요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려기간”이라며 “정상적으로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로 2월 첫째·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경찰, 제주항공 참사 특별수사단 편성

국가수사본부장 직속…2개 팀 48명 규모

경찰이 12·29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전남경찰청에 설치된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를 박성주 국수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오는 29일 출범해 공식 업무에 나서며,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인근 건물에 꾸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남경찰청 내 수사본부는 해체된다.

수사팀은 서울·인천·경기북부·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경찰청 2차기해범죄수사팀·디지털포렌식센터 등 2개 팀 48명으로 꾸려진다.

단장은 정성학 경남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팀장은 총경급 2명이 맡는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수사 지연 등에 대한 우려와 사고 현장 수사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관련 기관·업체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수사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사 속도가 더딘 점 등을 고려해 특별수사단이 새롭게 꾸려진 만큼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하겠다”면서 “수사 기록을 인계 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소방본부장 직급 격상 ‘소방준감→소방감’

광주와 대전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격상된다.

소방청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대도시 소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을 명확히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와 대전은 대도시이지만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준감에 머물러 있어 대형 재난 현장에서 경찰(차안감), 군(소장) 등 타 기관 지휘관과의 직급 불일치로 인한 지휘·협업에 한계가 있었다.

소방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의 현장 지휘권이 강화되고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은 최근 급증하는 지역 소방 수요와 확대된 업무 범위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소방청은 밝혔다.

광주와 대전은 인구와 도시 기능 면에서 광역 재난 대응의 핵심 거점이다.

그런데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화재, 광주 타이어 공장 화재, 신축건물 붕괴 사고 등 두 지역에 대형 재난이 잇따르면서 소방 조직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해졌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